



여시재 홈페이지(fcinst.org)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흑자 구조 안 바뀌면 효과 없어

지어 “미국의 제조업 귀환은 가짜 명제(僞命題)”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중국의 심드렁한 반응은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 외에도 중국이 현재 제4차 중국판 산업혁명을 추진하며 세계 제조강대국을 지향하는 상황과 관련 있다. 국무원이 2015년 제시한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를 설정했고 장기적으로 제조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3단계 발전전략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 및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와 제조업 간 융합발전을 통해 민간 창업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런 중국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계를 드러낸 미국의 제조업 부활 및 성장동력 장악은 그다지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도 중국의 입장에서 불변하다.

물론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객관적 수준



전자동 생산시스템을 갖춘 중국 하이얼. [중앙포토]

트럼프가 명령·제재 강경 입장 댈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야기할 것
인건비 상승, 저성장 들어선 중국
인터넷·제조업 융합 발전 추진

을 낮게 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3D 프린터, 디지털 설계 기술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고 중국의 우위를 강조하는 견해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펑(易鵬) 반고싱크탱크 이사장은 중국이 미국보다 강한 분야로 인력 자원, 토지, 물류, 에너지, 자금을 꼽았다.

글로벌 경제 침체기를 맞아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장기적으로 제조업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라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제조업 혁신, 산업체질 업그레이드라는 국가적 과제를 등에 업고 공급 쪽 개혁과 일대일로 등을 추진하는 중국의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미국 제조’ ‘유럽 제조’ ‘중국 제조’를 넘어 ‘글로벌 제조’가 트렌드가 됐다는 사실이다.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연동성이 강화된 시점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중국의 자국 산업정책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피하러 미국 현지생산 늘려야 하나 고민

는 미국에서 약 385만 대(2015년)를 생산하고 있다. 오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는 657만 대다. 즉 이미 일본 자동차 업체는 신차 판매 대수의 60%를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어 현지 생산을 늘리는 데 따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도요타는 미국 내에 9개 생산 거점을 갖고 있고 닛산은 5개, 혼다는 7개 생산 거점을 갖고 있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 이 점도 트럼프의 미국을 설득하는 데 일본 기업의 강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미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원래 자급자족 국가이고, 자동차산업에서도 자국시장에서 자기완결적으로 생산·유통·소비가 가능하다고 믿는 국가여서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전비와 현지 종업원의 교육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신흥국으로의 생산지 이전이 총비용에



일본 도요타는 미국 내 9개 생산거점을 갖고 있다.

이전비·현지 교육비 포함하면
생산기지 이전이 되레 적자
중국 인건비 가파르게 올라
미국 중서부 공장입지 매력적

서 볼 때 적자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특히 중서부)이 제조업 공장 입지로서 매력을 되찾고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로 일본 업체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인건비다. 중국에서 가파르게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의 등장을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운영 체제를 수정할 기회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일본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운영하는 정보 교환 사이트에는 ‘트럼프의 관심이 국내로 향해 있는 지금 일본이 경제적인 자주독립을 통해 내수 중심의 풍요로운 국가로 변모시킬 기회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논설이 실렸다. 세계화 속에서 ‘패배를 강요당해 왔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일본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등장을 성찰의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있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의 고용 감소 경향에 맞물려 평균 급여도 하락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일본이 미국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야마모토 류조(山本隆三) 일본 국제환경경제연구원 소장인 미국 이상으로 일본에서 제조업 부활과 이를 위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과 에너지 비용 삭감을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유럽 한계에 부딪힐 것

국제분업 통해 가격 경쟁력 유지 미국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악영향

고주현 연세대 장모네 EU센터 연구교수
김동혁 고려대 코어사업단 연구교수

유럽의 싱크탱크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미 제조업 고용 감소의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비판적 전망이 우세하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미국 경제의 성장엔진은 전통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이므로 제조업 부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라진 미 제조업의 일자리 대부분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보다 공장 자동화 등 기술 진보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미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악영향을 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 기업들은 광범위한 국제 분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미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생산성이 낮은 자국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례로 현재 보잉사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조립하는 최첨단 항공기인 드림라이너의 부품 대부분은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는 물론 일본 등에서 조달된다. 해외생산부품이 항공기 전체 원가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보잉사가 국제 분업에 의존하는 이유는 내구성이 강한 양질의 부품을 국내보다 해외에서 공급받는 게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근본 정책이 없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드인 USA’ 정책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역 상대국에 피해를 줄 경우 교역 상대국들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미 보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때 중국·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되면 미 제조업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국경조정세(BAT) 도입은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은 물론 미국 내 산업(기업) 간에도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수출기업들은 대규모 감세 혜택을 누리려는 반면 대형 유통회사 등 수입업

체들은 20%에 이르는 높은 세금으로 인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는 수입은 줄고 미국산 제품의 소비와 수출이 촉진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490억 달러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넷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하 등 제조업 되살리기 정책으로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가 이뤄지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달러 강세가 초래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는 부메랑 효과가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국 중심의 제조업 되살리기

재정지출 확대하면 인플레 불러
긴축 통화정책 불가피할 것
달러 강세로 수출 경쟁력 약화

공약은 말처럼 쉽게 실현되기 어려우며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보고서들은 트럼프의 공약 자체나 그 실현 여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 중 하나의 하부 분석단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의 재산업과 정책들은 그 내용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미국의 산업구조 재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전문가들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미국의 대내외 정치·경제 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세계 정치·경제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르게이 톨카초프는 트럼프의 재산업화 정책의 성과와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이 영역을 장악하고 강화하려는 미국의 금융·산업집단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호 정책에 있다고 평가한다. RIAC의 파벨 카넵스키는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이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시대의 산업·노동 정책을 모델로 한 백인 중심의 미국 노동시장 재편정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